

“유관 직역간 갈등 불리일으켜”...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민주 “거짓에 맞서 재의결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 “국민 분열 택한 것... 간호법,尹 대선 공약·국힘 총선 공약” 원내지도부·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규탄대회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이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규탄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이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독선적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호법이 보건 의료인 간 협업을 저해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지만 간호법은 업무 범위 관련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그간 아무 문제 없이 말쑥하던 법 조항이 왜 직역간 혼란을 초래하고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게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이던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번의 소위를 거쳐서 작년에도 현 여당에 있는 상황서 합의처리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0일간 계류된 간호법을 비롯한 복지위의 여러 법안도 통과시켜줄 것을 구두, 공문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 법사위원장은 이런 복지위의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1일 간호법을 비롯 복지위 법들을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법안소위로 보내버렸다”고 꼬집었다.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 시설 관리직원도 충원해야”

장연국 도의원, “도내 20년 이상 된 학교 시설 전체 학교의 66.7%... 관리직은 정원 대비 부족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대응할 인력 확충을”



도내 교육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관리기관 신설과 그에 따른 시설 전문직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시설물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교육시설 전문관리기관 신설과 그에 따른 시설 관리 직원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된 학교 시설은 전체 학교의 66.7%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직은 지난 1월 기준 145명에 불과해 정인 451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 인력구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린스마트스쿨 설계와 미래 학교 공간 재구조화,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학습공간 혁신, 그리고 융복합 창의공간 조성 등 전북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지자체 신규형 사업, 폐교 증가에 따른 활용과 관리 등 도교육청의 시설사업 증가로 현 조직과 시설 관리업무 모두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교육시설 전담 기관의 부재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 점검 기관을 통해 교육시설의 상시적·전문적 관리와 학교 시설 생애주기 단계별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안전성 향상과 업무경감이라는 현장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갈수록 학교 시설은 복잡해지고 첨단화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관리직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보건복지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의회 상임위, 추경 예산안 심사

교육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만전 기해야”

심의 앞서 교육현안 정책 질의... “특자도 특례 발굴도 반영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중기전북교육 재정 변경계획안에 대해 “2024년부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에듀케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의원은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사업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원 의원(남원1)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열체크기 등 고가의 장비 관리와 보관이 부실하다”라며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용 연한이 지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농협이 면 단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예로 들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전주2)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BTL 사업 당시 교육재정이 없어 민간 자본을 이용한 측면을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BTL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계획만 으론 부족한 측면을 내실이 있게 재검토해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농산경위 “신규 사업 재검토, 낭비요인 없이 노력해달라”

도 기업유치지원실·농축산식품국·농업기술원 대상 추경 심사 새만금산단 임대 용지 확보·도 금고 이자율 협약 재검토 등 주문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슬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직장체제가 적정한 판단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고, 노동 3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도 적절한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옹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93천만 원으로 자료에 명시했는데 예치금에 비해 너무 작다고 지적한 뒤 3년 마다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이 1.87%는 너무 적기 때문에 재원 확보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인입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전북도가 개입할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20~30대 청년들이 어려움에 놓인 현실에서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중재할 수 있는 간담회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교육 인프라 확충 집중”

민주 신영대 의원 “재선 목표” 총선서 후보 간 경쟁과 관련 “공정하게 경선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군산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재선 목표”를 공선 목표로 군산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6일 “지난 3년 동안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전념했고 절박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의원직을 내건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산단 아차전지 산업 거점 급부상 △군산도 개발 가시화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 △대야-용천 복선전철화로 준고속철 개통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중앙 정치 행보와 관련해 당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 등을 거치면서도 지역 경제·산업 회생을 최우선에 두고 개인 정치 행보는 철저히 자제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 중앙 정치도 함께하며 지역의 현안을 푸는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 예정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간 경쟁과 관련해 “호남 지역은 경선 없이 후보가 확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에 출마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선을 거친다는 게 특별당규의 특이사항”이라며 “공정하게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뉴스1

전북도 정보화위원회 내실화 효율적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염영선 도의원, ‘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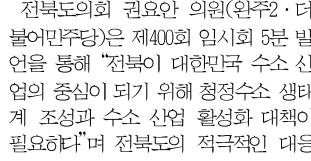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정읍2)은 16일 전라북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보화위원회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염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3년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연 3회 미만 개최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안전 발생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전북도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점검, 관련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건의 발생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내실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염영선 의원은 “정보화위원회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전라북도 정보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수소기술원 유치 적극 대응해야”

권요안 도의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 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됐지만 수소 충전소는 9개에 불과해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렇다 보니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도민들도 망설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전북도의 수소 관련 예산 역시 기관 구축사업이 대부분이고 기업 지원 사업은 전무해 수소 기업 유치도 최근 2년간 4개사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할 기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할 수소 관련 기업 유치와 기업이 RE100을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인프라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

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성장전략과 지원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소 수소 창출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산, 한국수소기술원 설립 등 수소경제 발전 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 수소 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수소 산업 육성과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부재 때문”이라며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수소기술원을 전라북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산시가 2019년 울산 수소 산업의 날을 지정한 뒤 수소융합기술연구소 2024년까지 건립하기로 했고, 경남도는 수소기술원 유치를 위해 2023년 수소 산업 육성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전북도가 일찌부터 수소 산업을 준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수소기술원 유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